

# 대법원 2024도10197, 2024전도120 살인등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피고인이 식칼을 절취하여 택시를 타고 신림역 인근에 하차한 후 피해자 한 명을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세 명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살인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모욕 부분을 제외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10197, 2024전도120 판결)

## 1. 공소사실의 요지

### ▣ 피고인의 인적 사항

- 1990년생 남성

### ▣ 모욕

- 피고인은 2022. 12. 27.경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해자 A에 관하여 ‘뭔가 게이같던데 그냥’ 등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A를 모욕함

### ▣ 사기

- 피고인은 2023. 7. 21. 12:03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 절도

- 피고인은 2023. 7. 21. 14: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식칼 2개를 절취함

#### ■ 사기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칼을 절취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 살인

-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한 즉시 살상 대상을 물색하다가 2023. 7. 21. 14:07경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를 향해 뛰어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sup>1)</sup>로 총 18회 찔러 몸통 자창 및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함

#### ■ 살인미수

-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그 무렵 걸어오던 피해자 F(남, 32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가방을 휘두르며 저항하면서 도망치는 바람에 위 피해자에게 목의 열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4:08경 피해자 G(남, 31세)를 스쳐 지나간 후 곧바로 뒤돌아 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목의 상세불명의 열린 상처, 척추동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계속해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그 무렵 피해자 H(남, 30세)를 향해 달려가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귀밑샘 손상, 두피 열상, 아래 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손목 및 손 부위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고 미

---

1) 위에서 절취한 식칼 중 하나임

수에 그침

## 2. 소송경과

### 가. 제1심

- ▣ 무죄 부분 ⇒ 모욕 부분
- ▣ 유죄 부분 ⇒ 나머지 부분
  - 무기징역, 몰수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 나. 원심

- 쌍방 항소기각
- 피고인 상고

## 3.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 원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당부

### 나. 판결 결과

- ▣ 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원심 수긍)

### 다. 판단 내용

- ▣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 등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직권으로 추가 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의 소송 절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음